

L'Humanité와 10·26 사건

朴 明 珍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I. 서 론	2. 정보단위 카테고리
II. L'Humanité의 기능과 역할	3. 테마별 지시적 의미 분석
III. 10.26 사건 보도 분석	4. 주요 카테고리 분석
1. 분석 방법	IV. 결 론

I. 서 론

10.26 사건 발생 이후 한달반 동안,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L'Humanité는 Le Monde나 Le Figaro 등 프랑스의 다른 고급일관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국문제에 관해 심층적인 보도기사를 실었다. 거의 20년간 한국을 통치해 온 정부의 수뇌가 피살된 사건이었으므로, 그것은 일단 기존의 통치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다분히 극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이 신문들은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사건발생 직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사건경위에 대한 발표내용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발표내용도 서로 모순되는 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었다. 사건의 경위도 명백치 않았고, 한국의 정치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예기되는 이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신문들은, 혹은 박정권의 통치체제나, 그 통치하의 사회상을 분석 평가하면서, 혹은 10.26 사건이후 한국상황의 추이를 관찰 분석해 나가면서, 제가끔 사건의 원인, 성격 등을 규명하고,朴이후의 한국장래를 여러 각도에서 전망해 보려고 시도했다.

이시기, L'Humanité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하였으며, 어떻게 이 이야기 하였는가? 또 어떤 점들을 강조했으며, 한국사태의 보도를 통해 전달하려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프랑스의 다른 일간지들의 보도태도와는

어떻게 달랐는가?

이같은 문제들에 해답을 얻음으로써, 불완전하나마, L'Humanité의 나아가서는 프랑스 공산당(PCF)의 한국에 대한 기본입장을 엿볼수 있을 것이다.

PCF는, 북한공산당과 공식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 통일 노선이나, 대남정책 등에 대한 북한측의 공식적인 태도의 표명이 있을 경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공산권내의 이념분쟁이 다각화된 상황에서, 선거정당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택하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을 포기한 PCF와, 폐쇄적이고 경직된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공산당과의 사이에는 비록 표면화된 적은 없어도, 많은 이념적 갈등이 잠재해 있을 것이므로, 한국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26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양측이 선전활동에 자중의 태도를 보였고, 북경이나 모스크바쪽에서도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PCF도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었다. L'Humanité는,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짤막하게 논평 없이 인용보도했을 뿐이며, 북경이나, 모스크바의 반응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PCF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L'Humanité는, 평양과 모스크바에 동조해야 할 의무의 구속을 받지않는 상황에서, PCF의 공식 입장이라는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독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0.26 사건에 대한 L'Humanité의 보도는 비록 PCF가 북한측의 공식적인 태도의 표시가 있을 경우 의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북한 측이 표명한 견해를 의례적으로나마 지지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을때, 한국과 북한을 보는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본 연구의 첫부분에서는 L'Humanité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려 했다. L'Humanité는 다른 일간지와 똑같은 배급경로를 거쳐 시판되며 15萬부 이상을 발행하는 대규모의 일간지로서, 당원이외의 일반 독자층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지만, 정당기관지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일반신문들처럼 정보와 오락의 제공, 여론형성의 기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 기관지의 기능도, 정당의 성격과, 정당이 기관지에 부여하는 사명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이 다양할 수 있다. 더구나 PCF처럼 출판사

업이 활발하고 각종의 일간지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각 간행물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그 간행물의 기능이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PCF내에서 L'Humanité라는 기구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PCF의 당기 관지에 대한 기본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L'Humanité의 한국사태에 대한 보도 경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0.26 이후 12.12사태 직전까지 한 달 반의 기간동안, L'Humanité에서 다루어진 한국문제에 관한 기사들을 Le Figaro, Le Monde와 비교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수량화작업에 기초한 정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을 따르지는 않았다. 양적분석과 혼합해서 구조주의적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내용분석 방법과 구조주의의 분석 방법의 접합은 두 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가들에 의해 흔히 시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로 Violette Morin이 1960년의 후르시체프 프랑스 방문시의 보도기사로 분석한 *L'Ecriture de Presse: Voyage de Khrouchtchev en France*⁽¹⁾와, 영국왕실의 앤드류 왕자 탄생시의 보도기사 내용을 분석했던 “*La Naissance d'un bébé royale*”⁽²⁾를 들 수 있다.

12.12사태 직전까지의 기간을 잡은 것은, 10.26사태 이후, 많은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던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수수께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자유자재로 한국의 사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구사하던 L'Humanité의 보도태도에 제동이 걸리고, 이후, 12.12사건에 대한 짤막한 사건보도만이 있은 후,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까지 거의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점은 Le Monde를 제외하고 Le Figaro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12.12사태는, 10.26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도 전환점이 되었으며, L'Humanité의 보도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12.12사태 직전까지로 분석자료를 제한했다.

Le Monde와 Le Figaro를 L'Humanité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Le Monde가 중도좌파지이고, Le Figaro가 온건보수파 계열의 신문이어서, 서로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 고급일간지라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1) V. Morin, *L'Ecriture de Presse: voyage de Khrouchtchov en France* Mouton Paris-La Haye 1969.

(2) V. Morin, “*La Naissance d'un bébé royal*” in *Communication* No. 1, 1960.

II. L'Humanité의 기능과 역할

프랑스는 10.26사건이 발생했던 1979년 현재 모두 10개의 중앙지를 갖고 있었다. 발행부수는 최고 100萬에서 최저 5萬 사이이며, L'Humanité는 79년의 발행부수가 150,161부로서, 10개의 중앙지중 6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L'Humanité의 비교대상이 될 온전 보수파 일간지인 *Le Figaro*와 중도좌파 일간지인 *Le Monde*는, 같은해 각각 312,683부와, 445,340부를 기록했다⁽³⁾.

PCF는 1945년 해방직후, 3개의 중앙지와 19개의 지방지를 갖고 있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중앙지중 L'Humanité만이 남았고, 지방지는 세개만이 남았다. 반면에, 주간, 월간으로 발행되는 전문지 분야에서는 팔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문예전문지, 농업전문지, 여성지, 청소년지, 아동지, 스포츠전문지등의 주간, 월간지등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지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싸이클 전문지에서 자동차, 퀸 투전문지까지 발행되고 있으며, 아동지도 나이별로 세분화되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다. 이들 전문지들중, 농업주간지인 *La Terre*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전문지 중의 하나이며, 아동지들은 카톨릭계의 아동 대상 정기간행물들보다도 앞서서 그중 *Pif*는 50萬부 정도가 팔리고 있어 아동물중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PCF는, 여러개의 출판사들을 소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서적 출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일간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분야에 국한 시켜볼 때 PCF의 출판정책은 이념교육과 공산당의 당세확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L'Humanité와 세 개의 지방기관지, 그의 세포신문(*journaux de cellules*)은 당원들의 이념교육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L'Humanité-Dimanche 등의 종합주간지와, 위에서 소개한 전문지들은,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다른 사회계층에 파고들어,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공산당 유권자층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동원되고 있다⁽⁴⁾.

(3) *Presse et Statistiques*, No. 6 Service juridique et technique de l'information., Paris, 1981. p.12.

(4) P. Gaborit, "La Presse Communiste" in *Projet*, No. 14, 1978. p. 1045.

이들 경기간행물은, 단일기구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 혹은 분야별로 출판 그룹이 형성되어,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 방식도 그룹별 독립체 산제로 되어 있으며, 당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L'Humanité는 L'Humanité와, 종합주간지인 L'Humanité-Dimanche를 발간하는 L'Humanité 그룹에 속해 있다. L'Humanité 그룹에도 당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PCF 당원인 L'Humanité 임직원의 봉급을 신문사 측에서 부담토록 되어있다. L'Humanité의 재원은 신문판매 수입과,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모든 일간지들이 신문 판매 수입만으로는 1부당 생산원가의 1/3이상의 적자를내고 있고, 그 적자는 광고수입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L'Humanité의 경우는, 광고수입이 전체 적자의 20% 정도를 메꾸어 줄 뿐이다. 광고수입은 L'Humanité 전체 재원의 11.8%에 불과하여 Le Figaro의 82%, Le Monde의 69.6%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⁵⁾ 많은 기업들이 L'Humanité에 광고 계재를 회피하는 이유로, 발행부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발행부수가 5만에 불과한 Le quotidien de Paris의 광고수입이 L'Humint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미루어, 신문의 정치적 경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L'Humanité의 적자는 자매지인 종합주간지 L'Humanité-Dimanche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메꾸어 진다. 이 주간지는 45만~50만의 발행부수를 갖고 있으며, PCF 당원을 중심으로 한 배급망을 통해 1/3을 소화시키고 있어서, 배급에 소용되는 어마어마한 경비(1부 판매 가격의 45~50%에 달한다)를 절약할 수 있어 흑자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umanité는 그같은 특별한 배급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른 일반 중앙지나 마찬가지로 배급담당 회사인 NMPP⁽⁶⁾을 통해 배급되고 시판된다.

L'Humanité는 다른 중앙지와 같은 배급경로를 거쳐 시판되며, 시사문제로부터 일기예보,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종합지로서 당원외에 일반 독자층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지만, 일차적인 대상 독자는 당 간부층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당간부라는 것은 중

(5) *Presse et statistiques*, p. 20.

(6) Nouvelles Messageries de la Presse Parisienne.

양당 간부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같은 지역 기구 간부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에 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앙과 지역의 당기관자들과 세포신문들은 당원들의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Humanité는 당간부 훈련원과 함께, 당 간부들의 이념적 재교육을 그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⁷⁾

정당은 단지 집권추구만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의 특성계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은 이 계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의 엘리트 당원은 대부분, 그 지지기반이 되어있는 계층의 출신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으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옹호한다는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이태리 공산당의 경우, 엘리트 당원 중 노동계급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적어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F의 경우, 이같은 모순은 비교적 덜해, 당원의 모집이나, 그 조직은 간부진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 출신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이태리 공산당에 비해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자계급의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1945년의 해방이후, 국민학교교사등의 뼈띠 부르조아 출신이 당 간부직에 대거 진출했고, 오늘날에는 중·고교교사 출신의 뼈띠·부르조아 지식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⁸⁾ 이로인해, 비록 당의 최고 지도층의 구성에 있어서는 노동자출신 우선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서, 중앙당 위원의 54.1%, 정치국원의 52.6%가 노동계급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위조직으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지구당 연립 위원회 멤버는 41.7% 정도로 줄어들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자출신의 비율은 점점 들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⁹⁾ 정당이 집권의 기회를 극대화시키고자 할 때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계층 이외의 사회계층을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새로운 사회계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계층출신 인사들의 영입은

(7) P. Gaborit, *art. cit.*, p. 1033.

(8) P. Gaborit, *Le Parti Communiste Français pendant la Ve République*, Univ. de Paris, 1973, p. 146.

(9) Rapport au Comité Central de Nanterre, août 1976, cité par P. Echevin in "La presse communiste en France," *Presse Actualité*, No. 58, 1976, p. 73.

불가피한 것이 된다. PCF 역시, 노동계급 이외에, 일반봉급자, 소상인, 무직자등의 사회그룹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뽀띠·부르조아를 대거 영입하게 되고, 점차 이들의 간부직 진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PCF의 조직은 점차, 출신계급 때문에 발탁된 간부들과, 그 능력으로 발탁된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뽀띠 부르조아의 증가는 당의 지도기구 내에, 노동자 엘리트의 지배를 위협하고,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이 흐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⁰⁾ 따라서, PCF로서는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전설을 위한 정치적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재확인시키고, 당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간부당원들의 이념적 재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재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당간부 훈련원과, L'Humanité이다.

따라서, L'Humanité는, 노동자 계급이외의 다른 사회계층에 파고들어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선거에서의 공산당지지 유권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같은 활동은, L'Humanité 그룹내의 L'Humanité-Dimanche와 기타 다른 경기간행물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umanité는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독자층을 의식해서 시대적 취향의 변화에 따라 편집방식이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도 별반 해본적이 없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L'Humanité가 발행부수를 증가시키고자 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1926년 L'Humanité가 재정난에 처했을 때,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당원 인사를 포함한 L'Humanité 보호 위원회(Comité de Défense de L'Humanité)가 조직되어 기금을 모아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다. 그 조직은 오늘날도 남아 있어서, L'Humanité-Dimanche의 강력한 배급망의 구실을 해 주고 있다.⁽¹¹⁾ L'Humanité도 CDH를 통하여나 유사조직을 만들어 독자층 확대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구태여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L'Humanité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사명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일간지들과 경쟁적인 위치에 서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10) P. Gahorit, *art. cit.*, p. 1043.

(11) R. Cayrol, *La presse écrite et audio-visuelle*, PVF, 1973, Paris, p. 198.

L'Humanité는 그같은 특수사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례에서, 기자나, 기고가들을 모두 공산당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L'Humanité-Dimanche나 다른 정기간행 전문지들이 편집진용에 비당원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L'Humanité의 고용인 수는 대략 130名 정도인데, 이중 기자의 수는 60名에 달하며, 이들의 봉급은 프랑스 일반 축련공의 임금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일간지에 비해 봉급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60여명의 기자수는, L'Humanité 규모의 대 일간지로서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5,000여명의 노동자 통신원들의 자원봉사로 많은 지면을 메꾸어 나가고 있다.

L'Huminté는 이처럼, 노동계급 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해서 당의 간부를 주요 독자층으로 삼아 그들의 이념적 재교육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력간의 끊임없는 이념적 마찰을 겪고 있는 PCF내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관점, 바꾸어 말하면, 가장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가까와지고자 하는 세력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이라 볼 수 있다.

III. 10. 26사건보도 분석

1. 분석방법

L'Humanité는 10. 26사건 발생 다음날인 10月 27日부터 12월 12일 사이에 12개의 기사를 할애하여 한국사태를 보도했다. 총 기사의 길이는 288CEC에 달한다.

CEC는 프랑스 신문연구소가 제정한 프랑스 신문기사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1CEC는 한변의 길이가 4.9cm인 정사각형에 해당되며, 프랑스 일반 일간지의 한 페이지는 88CEC에 해당한다.

Le Figaro는 이 기간 11개의 기사를 실었고, 그 총 길이는 254CEC에 달하고, Le Monde는 19개 기사에 1137CEC가 된다. 기사의 총 길이만을 가지고 보면, Le Monde가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할애했고, 그 다음이 L'Humanité, Le Figaro 순이다. 각 신문의 광고지면을 제외한 보도지면 전체에서 한국사태를 다룬 기사가 차지하는 지면의 비율이 산출되어야 세 신문이 한국문제 보도에 둔 비중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지만, 신문전

체를 우송해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이 작업은 불가능 했었다.⁽¹²⁾ 각 신문이 발행하는 지면수는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Le Monde*는 28~32면, *Le Figaro*는 22~28면, *L'Humanité*는 16~18면에 이른다.

정보단위 : 기사의 분석에 있어서는, 정보단위(*unité d'information*)을 분석단위로 삼았다. 정보단위란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단위의 주제로서, 정보 전달을 위해 동원된 기호들이 지시적 의미와 함축의미를 동시에 읽게 되는 순수정보의 층위를 말한다. 예컨대, *L'Humanité*의 한 기사에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등 여러나라의 다국적 기업에 한국의 문호를 개방해 이들이 풍부한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박대통령이 일본, 구미의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장려했다는 지시적 의미와, 박 대통령이 한국을 여러 제국주의 세력의 희생물로 만들었다는 함축의미를 갖고 있다. *Le Monde*의 한 기사는 “대외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 사절단의 파견을 점차 증가시켰고, 프랑스로부터의 원자로 구입계획안도 이같은 대외관계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문장의 지시적 의미는, 박정부가 대외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관계 증진을 꾀했다는 것이고, 함축의미는 특정국가와의 관계 강화로 예속상태에 빠질 위험을 지양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의 주제는 모두 박정권의 해외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박정권——대외정책 카테고리의 정보단위로 코딩된다. 물론 두 신문이 박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는 서로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한국문제에 대한 세 신문의 태도와 관점 분석의 난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정보단위는 위와 같이 한 문장에서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한 문장이나, 짧은 제목에서도 여럿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여러 개의 문장이 단 하나의 정보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독재자 박정희, 쿠데타로 피살되다”라는 타이틀은, 국가수뇌로서 박정희는 독재자였다는 내용과, 10·26사건은 쿠데타였다는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써,朴—국가수뇌의 카테고리와 10·26—쿠데타의 카테고리 두 가지로 코딩된다. *Le Figaro*는 10·26 당시 궁정동의 상황과 사건의 진행을 한국정부가 발표한 내용 전문

(12) 분석 자료로서는 문공부 현지공관의 보고서와 Documentation Française의 스크립트을 사용했다.

을 소개하여, 여러 개의 콜론에 걸쳐 상세히 보도하였는데, 이 부분 전체가 10.26——암살의 정보단위로 코딩된다. 다만, *Le Figaro*의 정보단위들의 평균 길이가 1,2CEC였기 때문에 이 내용의 보도 지면을 CEC로 측정하여, 여섯개의 정보단위로 계산했다. 이처럼, 여러개의 문장이 하나의 정보단위를 구성할 때는 그 길이가 평균 CEC치 보다 길 경우, 평균치에 준해서 정보단위의 개수를 계산했다.

정보단위는 활자의 크기, 종류, 조판의 형태와 무관하다. 보통, 기사의 제목에 사용되는 활자의 크기, 제목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것이 독자를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정보의 양적인 크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의 크기는 그에 종속되는 기사의 길이와 비례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 관례로서, 제목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면 제목이 전하는 정보가 그에 종속되는 기사속에서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제목은 그에 종속되는 기사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는 정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제목의 활자크기를 정보의 양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작업이 된다. 오늘날 많은 신문에서, 대형타이틀이 그러한 논리성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궁금증을 축렬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알쏭달쏭한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암시적인 대형타이틀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때는 대체적으로 보조기사를 읽지 않고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목의 활자크기는 제목의 정보적 기능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제목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로 정보의 양을 환산하려는 노력도 불필요하게 된다.

사진, 삽화의 경우에는 주제를 찾아 정보의 카테고리를 찾아 낸 다음 그 면적을 각 신문의 정보단위들의 평균 CEC면적과 비교하여 빈도를 계산했다.

정보단위를 분석단위로 삼은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L'Humanité*의 한국사태에 관한 기사들이, 한 개의 논평기사를 제외하고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구체적 사실들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Le Figaro*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Le Monde*는 해설과 논평기사가 많아서, 이같은 분석들을 적용함으로써, 신문의 태도 분석이 단순화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서술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실보도

기사의 경우에는 정보단위의 사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방법이어서, L'Humanité의 기사분석에는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였기에 Le Monde에 적용할 때 생기는 다소의 무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태도분석 : 위의 방법으로 추출된 정보단위들의 리스트를 보다 표현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L'Humanité와 한국문제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를 다른 신문들의 그것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주어진 사건은 다루는 영향, 혹은 그 신문 고유의 표식으로서 독자가 포착하게 되는 기본적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용하는 언어, 시제 사용법, 앞뒤의 문맥, 부호 사용법 등을 통해 드러난다. 태도의 측정은 호의적·중립적·비호의적의 3분척도법을 사용했다.

지시적의미, 합축의미 : 태도가 측정된 정보단위의 리스트를 기본자료로 해서, L'Humanité 기사를 속에 담겨진 지시적 의미와 합축의미를 파악하여, L'Humanité가 한국사태 보도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정체와 그 핵심을 추적했다. 지시적 의미는 특정주제를 다루는데 있어 L'Humanité가 채택한 사실자료, 혹은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방법 등, 그 주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다른 신문의 그것과 테마별로 비교하였다. 합축의미는, 주제에 관심도가 높았고, 중요성이 부여되었는가 하는 사실과, 그같은 카테고리들이 다루어진 시각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엿보이는가 하는 점들을 기초로 하여 다루었다. 주요 정보단위의 분석은 바로 합축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정보단위 추출 : 주요 정보단위란 신문사의 관심도가 높고, 또한 신문사의 입장과 태도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는 주제의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주요 정보단위는, 평균이상의 빈도수를 갖고 있는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하여, 절대태도 표명도, 균형 태도 표명도, 절대경향도, 균형경향도 등을 산출하여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항목별 평균치 이상의 수치를 드러내는 카테고리의 정보단위들로 했다.

절대태도 표명도는 특정 카테고리의 정보단위의 전체수 중에서 “호의적”이건 “비호의적”이건 태도 표명이 이루어진 수가 차지하는 비율($\frac{\text{태도표명수}}{\text{전체수}} \times 100$)로서 특정 카테고리내에서 태도 표명의 정도를 드러내준다.

균형태도표명도는, 절대태도표명도에 빈도율이 반영된 것으로(절대태도표명도 \times 빈도율) 다른 카테고리와 비해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열의의 정도를 드러내 준다.

절대 경향도는 특정 카테고리의 정보단위내에서 경향을 상반되는 태도의 표시가 있을 때, 두 경향의 수적 차이가 전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frac{\text{우세경향}-\text{열세경향}}{\text{전체수}} \times 100$)로서, 특정 카테고리내에서 지배적인 경향의 정도를 드러내준다.

균형경향도는 절대경향도에 빙도가 반영된 것으로서(절대경향도×빙도율),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특정 카테고리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열의의 정도를 드러내준다.

주요 정보단위 분석 : 주요 정보단위의 리스트를 통해, L'Humanité와 다른 두 신문사들이 각기 한국문제에서 어떤 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어떠한 점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관심의 정도와 향방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주요 정보단위들을 다룬 태도와 관점으로 종합 정리해 봄으로써, L'Humanité가 한국에 관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즉, L'Humanité가 깊은 관심을 보였고,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했던 문제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어졌는가를 밝혀 봄으로써, L'Humanite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

2. 정보단위 카테고리

L'Humanité의 정보단위 총수는 194개였고, Le Figaro와 Le Monde는 각기 196개, 711개였다. 정보단위의 카테고리 총수는 55개로서, L'Humanité는 이 중 44개, Le Figaro는 43개, Le Monde는 51개를 갖고있다. 세개의 신문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카테고리는 모두 39개가 된다. 정보단위들을 테마별로 분류해 보면 모두 8개의 카테고리가 되며, L'Humanite는 7개, Le Figaro와 Le Monde는 8개를 가지고 있다.

L'Humanité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국역사의 테마이다. 이로인해, 한국역사에 관한 정보단위들은 세분하지 않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다. 인물에 관해서는 대부분 박정권의 후계자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그 행적을 더듬고 있는데, 10.26사건에 관련된 인물들 중, 사건설명을 위해 명명되었을 때는 10.26사건 경위에 포함시켰고, 사건설명을 떠나, 다루어졌을 때는, 인물로 코딩했으며, 각 인물들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박체제, 최정부, 반체제운동등의 테마로 분류했다. 정보단위들을 신문별로 테마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L'Humanité

〈朴체제〉

	총계	중립적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 경향
朴一국가수뇌	15	5	0	10	—
경제정책	10	0	0	10	—
朴一경력	6	0	0	6	—
對의회정책	6	0	0	6	—
유신헌법	5	0	0	5	—
KCIA	4	0	0	4	—
對外政策	4	0	0	4	—
朴一장례식	4	2	0	2	—
인권정책	3	0	0	3	—
軍內분열	3	3	0	0	0
對북한정책	3	0	0	3	—
김종필	1	0	0	1	—
정일권	1	0	0	1	—
합계	65 (100%)	10 (15.4%)	0	55 (84.6%)	—

〈최정부〉

	총계	중립적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 경향
계엄사태	15	13	0	2	—
對반체제정책	7	2	0	5	—
사회질서	7	5	0	2	—
후계논의	5	1	0	4	—
최규하	5	3	0	2	—
10·26 사건수사	4	2	0	2	—
정승화	3	2	0	1	—
對유신체제정책	1	0	0	1	—
합계	47 (100%)	28 (59.6%)	0	19 (40.4%)	—

〈반체제 운동〉

對朴정부국민여론	7	0	7	0	+
야당의저항	6	6	0	0	0
재야세력	5	0	5	0	+
부마사태	3	0	3	0	+
노동운동	3	0	3	0	+

김 대 중	6	6	0	0	0
윤 보 선	3	1	2	0	+
김 영 삼	3	1	0	2	-
합 석 현	1	1	0	0	0
합 계	37	15	20	2	+
	(100%)	(40.5%)	(54.1%)	(5.4%)	

〈한미 관계〉

	총계	중립적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경향
10. 26—美 개입	11	0	0	11	-
10. 26—美반응(군사적)	7	2	0	5	-
朴一카터	4	0	0	4	-
10. 26—美반응(외교적)	3	1	0	2	-
한미방위조약	2	2	0	0	0
美개입전망	2	0	0	2	-
합 계	29	5	0	24	-
	(100%)	(17.2%)	0	(82.8%)	

〈10. 26사건경위〉

ку 테 타	4	4	0	0	0
사 고	3	0	0	3	-
암 살	2	0	0	2	-
총 계	9	4	0	5	-
	(100%)	(44.4%)	0	(55.6%)	

〈북한의 태도〉

北—對 美	5	5	0	0	0
北—對 韓	3	2	1	0	+
합 계	8	7	1	0	+
	(100%)	(87.5%)	(12.5%)	0	

〈전망〉

민 주 화	6	2	4	0	+
유신체제유지	2	0	0	2	-
합 계	8	2	4	2	+
	(100%)	(25%)	(50%)	(25%)	

Le Figaro

〈朴체제〉

	계	중립적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 경향
朴—국가수뇌	12	5	5	2	+
朴—장례식	10	4	6	0	+
김재규	10	5	0	5	-
對의회정책	8	0	0	8	-
유신헌법	7	0	0	7	-
인권정책	5	0	0	5	-
K C I A	1	0	0	1	-
對북한정책	1	1	0	0	0
軍內분열	1	1	0	0	0
합계	55 (100%)	16 (29.1%)	11 (20%)	28 (50.9%)	-

<崔정부>

10.26 사건 수사	16	16	0	0	0
계엄사태	9	7	0	2	-
후계논의	6	3	0	3	-
최규하	5	1	0	4	-
對 유신체제 정책	4	0	4	0	+
對 반체제 정책	4	1	0	3	-
정승화	3	3	0	0	0
사회질서	2	2	0	0	0
전두환	2	2	0	0	0
對 야당정책	1	1	0	0	0
의회성	1	0	0	1	-
합계	53 (100%)	36 (67.9%)	4 (7.6%)	13 (24.5%)	-

<한미관계>

10.26—美반응(외교적)	7	7	0	0	0
美의 한국방위정책	7	7	0	0	0
美—카터	6	6	0	0	0
장래 美 개입전망	3	0	3	0	+
10.26—美반응(군사적)	2	2	0	0	0
10.26—美 개입	2	2	0	0	0
합계	27 (100%)	24 (88.9%)	3 (11.1%)	0	+

<10.26 사건경위>

쿠데타	9	8	0	1	-
암살	9	4	0	5	-

사 고	6	4	0	2	-
합 계	24	16	0	0	-
(100%) (66.7%) 0 (33.3%)					
<반체제운동>					
김 영 삼	8	4	2	2	0
부 마 사 태	4	3	1	0	+
야 당 저 항	3	2	1	0	+
김 대 중	2	2	0	0	0
재 야 세 력	2	2	0	0	0
노 동 운 동	2	1	1	0	+
對박정부국민여론	1	0	1	0	+
합 계	22	14	6	2	+
(100%) (63.6%) (27.3%) (9.1%)					
<전망>					
軍 의 개 입	4	1	1	2	-
민 주 화	3	0	3	0	+
야 당 집 권	2	1	1	0	+
유 신 체 제 유 지	1	1	0	0	0
합 계	10	3	5	2	+
(100%) (30%) (50%) (20%)					
<북한의 태도>					
北 - 對 美	3	3	0	0	0
北 - 對 韓	1	0	0	1	-
합 계	4	3	0	1	-
(100%) (75%) 0 (25%)					

Le Monde**<朴체제>**

	계	중립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 경향
朴 - 국 가 수 뇌	35	21	10	4	+
김 종 필	34	14	0	20	-
경 제 정 책	33	3	9	21	-
K C I A	32	1	0	31	-
인 권 정 책	16	1	0	15	-
정 일 권	15	10	0	5	-
朴 - 장 례 식	12	7	0	5	-
유 신 현 법	10	1	0	9	-
김 재 규	10	7	0	3	-

軍 内 分 열	9	8	1	0	+
對 의 회 정 책	9	1	0	8	-
對 外 정 책	8	2	2	4	-
對 北 한 정 책	8	2	0	6	-
이 후 락	7	3	0	4	-
朴 一 경 력	6	2	0	4	-
문 화 정 책	4	2	1	1	0
" "	248	85	23	140	-
	(100%)	(34.3%)	(9.3%)	(56.4%)	

〈崔정부〉

對 유신체제 정책	33	5	23	5	+
계 염 사 태	24	19	0	5	-
10.26—사건 수사	22	7	0	15	-
최 규 하	20	11	0	9	-
사 회 질 서	17	8	9	0	+
對 반체제 정책	16	0	10	6	+
對 야당 정책	10	7	3	0	+
정 승 화	8	7	0	1	-
對 軍	6	5	0	1	-
이 회 성	4	0	0	4	-
전 두 환	2	2	0	0	0
합 계	162	71	45	46	-
	(100%)	(43.8%)	(27.8%)	(28.4%)	

〈韓美관계〉

장례 미개입 전망	22	14	8	0	+
10.26—美 개 입	22	4	0	18	-
朴 一 카 터	19	10	0	9	-
한미 방위 조약	14	6	5	3	+
10.26—美반응(군사적)	13	12	0	1	-
10.26—美반응(외교적)	11	11	0	0	0
합 계	101	57	13	31	-
	(100%)	(56.4%)	(12.9%)	(30.7%)	

〈10.26사건경위〉

쿠 테 타	28	9	0	19	-
암 살	23	9	0	14	-
사 고	18	13	0	5	-
	69	31	0	38	-
	(100%)	(44.9%)	0	(55.1%)	

〈반체제운동〉

	계	증립적	호의적	비호의적	지배적경향
야당저항	14	9	3	2	+
부마사태	13	7	6	0	+
제야세력	13	5	8	0	+
김대중	10	8	2	0	+
對박정부국민여론	2	1	1	0	+
김영삼	2	1	0	1	0
윤보선	2	2	0	0	0
합석현	1	1	0	0	0
합계	57 (100%)	34 (59.6%)	20 (35.1%)	3 (5.3%)	+

〈전망〉

군개입	22	4	4	14	-
민주화	12	2	10	0	+
야당집권	7	5	2	0	+
유신체제유지	4	0	0	4	-
합계	45 (100%)	11 (24.4%)	16 (35.6%)	18 (40%)	-

〈한국역사〉

	21 (100%)	5 (23.8%)	4 (19.0%)	12 (57.2%)	-
〈북한태도〉					
北一對美	5	2	0	3	-
北一對韓	3	2	1	0	+
	8 (100%)	4 (50%)	1 (12.5%)	3 (37.5%)	0

위의 정보단위 리스트는 L'Humanité가 보도한 한국문제에 관한 기사 전체의 대체적인 지시적 의미(dénotation)와, 아울러 함축의미(connotation)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어 준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Le Monde와 Le Figaro의 정보단위들은 L'Humanité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의미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3) 테마별 지시적 의미분석

〈박체제〉

朴—국가수뇌의 카테고리는 박대통령에게 각 신문이 부여하는 국가수뇌로

서의 정통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주로 박대통령을 지칭하는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독재자” “대통령” “朴正煥” 혹은 단순히 “박정희”등의 네 가지 방법으로 불리워 졌는데, “대통령”으로 불리워 졌을 경우에는 정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호의적”에, 단순히 “박정희”로 불리워 졌을 때는 태도가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립적으로, “독재자”, 혹은 “朴正煥”的 경우에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호의적”으로 구분했다.

L'Humanité는 15개중 다섯번에 걸쳐 “박정희”로 나머지 열번은 독재자 혹은 朴正煥(dictateur, le dictateur Park Chung Hee, Général Park)으로 지칭했고 단 한번도 Présid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L'Humanité는 박대통령에게 국가수뇌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Le Monde나 Le Figaro는 간혹 “독재자”로 부른적도 있지만, Président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L'Humanité와는 달리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정책 : Le Figaro를 제외하고, Le Monde L'Humanité는 모두 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다루었다. Le Monde는 경제성장을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들을 지적했으나, L'Humanité는, “경제적 기적” (“miracle économique”)라는 말에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그것이 과장되어 (brodé) 소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성장설에 승복되지 않았음을 표시했고, 박정부의 경제정책이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distorsions sociales intolérables) “외국자본에의 예속도 심화”(dépendance totale a l'égard de capitaux étrangers), “노동자들의 무제한 착취”(exploitation illimitée de, travailleus)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朴一경력 : 박대통령의 경력에 대해 Le Figaro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Le Monde, L'Humanité는 비교적 상세히 추적했다. L'Humanité는 박대통령의 일본군대 복무 경력과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경력을 들어 자주 “주인을 바꾸어”(Changeant de maîtres) 봉사한 “제국주의 창조물의 상징” (le symbole des créatures de l'impérialisme)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Le Monde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박대통령의 여순반란시건에의 관련성도 소개했던 반면, L'Humanité는 이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對 의회정책, 유신헌법, KCIA, 인권정책 : 이 항목에 있어서는 세 신문 사이에 태도나 관점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을 엿볼 수 없다. 세 신문 모두

유정회제도,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 긴급조치법, 야당탄압, KCIA를 통한 정보정치와, 정적의 제거방식등을 들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이 무시된 독재정책이었다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對外정책 : 박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해 *Le Monde*는 한일관계 개선, 유럽과의 관계다변화, OLP와의 관계개선 노력, 중동진출 등 비교적 다각적으로 다루면서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다른 한편, 가입국이 몇 안되는 세계반공연맹의 회원이었던 점, 월남전에서의 한국군의 잔인성, 중동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둘연 OLP 접근으로 돌변한 점 등을 들어 경직된 반공정책과 기회주의적 외교정책이라고 은근히 꾀집기도 했다. 그러나 *L'Humanité*는 구미, 일본 등지의 독점자본의 침투와 월남전 참여만을 언급했으며, 이 모두가 박정권의 대외정책이 “제국주의 세력에 전적으로 의존” (*dépendance totale aux forces impérialistes*)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朴—장례식 : 세 신문 모두 박대통령의 장례식 프로그램과, 장례식에서의 한국 국민의 반응을 보도했다. *Le Figaro*는, 서울 시민의 애도하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면서朴 정권이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Le Monde*는 애도모습에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계엄하의 공포분위기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박정권 반대세력의 반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L'Humanité*는, 국민의 애도모습이 박정권시절, 군중대회에서의 혈서장면들처럼, 정부당국에 의해 연출된 것 (*mise en scène de l'affliction populaire*)이라고 주장했다.

軍內분열 : 유신말기에 있었던 군내의 온건파와 강경파간의 분리를 들어 *Le Monde*는 자유화를 원하는 국민의 의지가 군일부의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보도했으나, *L'Humanité*는 軍의 분열이, 10.26사건 발생에 작용한 요인중의 하나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단순히 통치방식에 대한 의견의 차이였다고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對 북한정책 : *L'Humanité*, *Le Monde* 두 신문만이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두 신문 모두, 박정권이 때로 정책의 모순이나 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의 관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휴전선에서 충돌사건을 일으켜, 남, 북한의 긴장을 유발시켜왔다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人物 : *Le Monde*와는 달리 *L'Humanité*는朴정권하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일권, 김종필 등이 조금씩 언급되었고, 두 인물 모두 박정권의 협조자였다는 점을 들어 이 인물들의 집권 가능성을 비호의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Le Monde*는, 10.26 이후의 한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과거 박정권하의 실력자들의 동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김종필과 정일권 두 인물의 과거의 행적, 현재의 헤게모니 투쟁 등을 상세히 추적했다. *L'Humanité*와는 달리 이들이 박정권의 실력자였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김종필은 과거의 여러가지 의혹사건에 관련된 부패인사이며, 정일권은 여성적인 모사군(*l'homme qui intrigue comme une femme*)이고, 미국의 조종을 받는 인물(*homme des Américains*)이라는 점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세 신문에서 모두 박정권에 대한 지배적 경향은 모두 비호의적인 것이었다. *Le Monde*와 *Le Figaro*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정보단위의 비율이 각각 34.3%와 29.1%이고 드물게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L'Humanité*에서는 중립적 태도가 15.4%로, 두 신문에 비해 훨씬 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였으며,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정부〉

계엄사태 : 세 신문은 모두 계엄령으로 제한된 활동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외에 *Le Monde*는 외국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는 신문, 잡지의 암수를 예로 들고, *Le Figaro*는 철저히 무장한 계엄군(*armée jusqu'au dents*)의 모습을 묘사하고, *L'Humanité*는 중앙청을 배경으로 하여, 서울시내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있는 탱크의 사진을 실는 등으로 해서, 계엄령하의 지나친 통제와 감시를 다소 비난하고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계엄령으로 제한된 활동내용을 담담히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對 반체제정책, 對 유신체제정책 · *Le Monde*와 *Le Figaro*는, 최정부의 긴급조치 9호 철폐 방안 연구와, 유신헌법 개정안의 계획 등을 들어, 최정부의 脱유신체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L'Humanité*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단지 최규하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따라 통대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사실을 비꼬아 보도했다. *L'Humanité*는 최정부의 對유신체제정책 보다는 對반체제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명동사

전 관련자 검거문제를 들어 반체제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Le Monde*나 *Le Figaro*도 명동사건 관련자 검거사실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Le Monde*는, 그보다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계획과 제적학생 복교 허용 계획, 김대중 석방 계획 등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며, 최정부가 반체제인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보이고, 자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사회질서 : 10.26이후 최정부하에서 한국사회가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세 신문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Humanité*는 그것이 “표면적인 휴전상태”(*Trêve apparenue*)일 뿐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Le Monde*는, 그것이 장례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된 정치적 휴전이라고,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매점매석 행위도 일지 않고, 외국 투자가들이나, 외국은행들도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팔레비 축출후의 이란사회의 혼란과는 달리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이롭게 보고 있었다.

10.26—사건수사 : 10.26사건 수사에 대해 *L'Humanité*는 “수사”(*enquête*)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붙여,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표시하고 있으나, *Le Figaro*는 수사진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는 하면서도 태도의 표명은 삼가했고, *Le Monde*는 사건수사가 막후 정권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人物 : *Le Monde*와, *Le Figaro*가 10.26사건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정승화, 이희성, 전두환 등의 인물에 대해 고르게 관심을 보인 반면, *L'Humanité*는 최규하와 정승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드러냈다. 최규하에게도 대통령의 명칭은 붙여주지 않고 단지 “최규하”로만 지칭했으며, 과거의 경력과, 박정권과의 밀착된 관계를 들어 “박장군의 충복”(*fidèle au général Park*)으로 비호의적으로 다루었다. 정승화는, 軍內의 온건파라는 점에 있어서는 비난을 면했으나, 박정권의 협조자였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Le Monde*나 *Le Figaro*의 최규하에 대한 평가도, *L'Humanité*와 별로 다르지는 않다. 두 신문은 최규하가 정치적 야심이 없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한 외교관 이재현의 표현을 빌어 “차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최규하는 “Yes man”이라는 정평이 나 있는 인물로서 현재도 “막후실력자들의 험수아비”(*jònnet des personnages puissants*)일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었다.

L'Humanité는 비록 최정부에 대해 한번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박정권에 비해서는 덜 비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박정권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 명도는 84.6%이었던데 비해, 최정부에 대해서는 40.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신문 중 L'Humanité가 최정부에 대해 가장 비호의적이며, Le Monde가 가장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e Figaro가 10.26사건 수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최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소극적 이었던 반면, Le Monde는 최정부의 여러 정책에 고른 관심을 보였으나, 정책문제에 있어 L'Humanité의 가장 큰 관심사는, 對반체제정책이었다.

〈반체제운동〉

對박체제 국민여론은 박정권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반체제 운동과 구별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L'Humanité를 비롯, 각 신문들이 구별해서 다루고 있어 독립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반체제 운동을, 야당, 재야세력, 학생 노동자별로 나눈것은, L'Humanité가 야당을 체제내의 “허용된 반대세력”(l'opposition tolerée)으로서 다른 반체제운동과 구분해서 다루고 있고, 재야세력의 반체제운동은,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의 반체제 운동을 말하며, 부마사태등의 학생운동, YH사건등의 노동운동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Le Monde와 Le Figaro의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생운동을 “부마사태”的 카테고리로 한 것은, 부마사태를 반체제 학생운동의 대표적 케이스로 보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對박체제 국민여론 : L'Humanité는 박정권하에서, 한국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한없는 갈망(*la soif nisatiabio de démocratie*)를 갖고 있었고, 민중들의 항거가 상승기로에 있었으며(*la montée de la protestation populaire*), 이것이 10.26사건이 생겨나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민들은 “자유로운 민주체제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었고(*la volonté du peuple Coréen de vivre eufin dans la liberté et la démocratie*),” “부당하게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으며(*la profonde aspiration nationale à la réunification indépendante et pacifique d'une patrie injustement divisée*)” 이것이 “백악관과 청와대를 괴롭혀 온 유령의 정체”(*le spectre qui hante les maisons “blanch” ou “bleu”*)로서, 10.26사건을 불가피하게 만들

었다는 것이다. *Le Figaro*나 *Le Monde* 역시, 한국국민이 박체제를 거부하고 민주화를 열렬히 바라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한 두번의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 저항 : 김영삼의 뉴욕타임스紙와 인터뷰 사건 뒤에 있은 김영삼의 제명, 잇달은 신민당 의원의 총사퇴 파동을 세 신문 모두 다루었으나, *L'Humanité*는 신민당이 체제내의 “허용된 반대파”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Le Monde*는 김영삼의 인터뷰 내용에서, 미국의 개입을 호소하는 부분을 들어, 신민당의對美의존적인 태도를 꾼집기도 했지만, *Le Monde*, *Le Figaro* 모두 야당이 김영삼 제명사건 이후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재야 세력 : 재야세력의 반체제 운동은, 명동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행적 까지 소개되었는데, *L'Humanité*는 이를 “독재체제에 단호히 항거하는 반대파”(l'opposition déterminée à la dictature)로서 야당의 반체제 운동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Le Figaro*는, 반체제 운동이 구야당 정치인 일부, 종교인, 노동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었던 운동으로, 김영삼 사건이후 이 운동들이 합류태세를 보임으로서, “자유를 원하는 민중의 소망을 표현”(exprime les aspirations populaires pour la liberté et la démocratie)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Le Monde*는 재야세력 중심의 반체제운동의 추이를 특히 주목하였다. 박정권하에서는, 긴급조치법에 둑여 산발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비교적 온건한 성명”(déclaration d'un ton relativement modéré)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박대통령 사후, 통일전선을 구축(former un front uni)하여 통일된 움직임을 보였으며,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공격을 삼갔으나, 점차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명동사건시 배포된 전단의 내용을 인용하여 태도의 표명없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반체제 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유신체제의 청산이며, 이는 반체제 인사들의 요구일 뿐아니라 대부분 한국민의 깊은 소망이기도 하다(non seulement une exigence des opposants mais le désir profond de la part des Coréens)고, *Le Figaro*와 마찬가지로 반체제운동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마사태 : 부마사태에 관해, L'Humanité는 그 경위, 과정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도하지 않았으나, 자유화를 원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한국 국민 의지의 집약된 표현(*convergence entre les aspiration sociales dans un pays où la main d'oeuvre est littéralement livréé aux sociétés multinationales, et la soif insatiable de démocratie*)으로 평가했다.

Le Figaro, Le Monde는 부마사태의 경위, 과정, 결과등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그것이 60년의 마산사건과 흡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존중을 원하는 반체제 물결이 겸葭을 수 없이 퍼져나갈 징조를 보인 것이며, 이것이 박정권내의 분열을 부채질하여, 10.26사건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노동운동 : 노동운동에 관해 L'Humanité는, 10.26사건 전 여름철에 빈번했던 파업사태를 환기시키고, 노동운동이 근본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횡포로부터 해방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점차 학생운동과 합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Le Monde는 노동운동 자체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체제내의 주요세력으로 소개했을 뿐이나, Le Figaro는 YH사건의 경위, 결과등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경찰의 폭력에 겁내지 않고 시위를 벌였던 “천여명의 용감한 여인들”(un millier de femmes couuagenges)이라고 표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人物 : Le Monde나 Le Figaro가 박정권에 관련되었던 인물이나, 10.26 이후 뉴스의 표면에 새로이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반면, L'Humanité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보였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중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납치사건, 연금상태들에 대해 뉴앙스 없이 보도했으나, 김영삼에 대해서는, “허용된 반대파”라 표현하여, 그의 투쟁운동을 그리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L'Humanité가 가장 호의적으로 본 인물은, 윤보선으로, 과거의 투쟁경력, 명동사건에의 관련을 들어 “독재체제에 대한 단호한 반대자”(opposant déterminé à la dictature)라고 표현했다. 합석현에 대해서는 “웨이커 교도인 지도자”(le dirigeant quaker)로서, 명동사건 주도자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만을 뉴앙스 없이 보도했다.

Le Monde는 김대중을, 박체제 반대파의 중심인물이고,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대통령당선이 확실한, 대다수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호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나, 주로 납치사건, 연금상태 등 반체제 탄압의

희생자로서의 면모를 더 부각시켰다. 김영삼에 관해서는, 對美的 존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으나,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김대중 석방뒤 신민당내에서 그의 위치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했다. 윤보선, 함석헌 등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립적 태도로 그들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국한했다.

Le Figaro는 윤보선, 함석헌 등의 재야인사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명동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소개없이 간략히 사건 관련자 체포 사실만을 보도 했다. Le Figaro는, 다른 두 신문에 비해 김영삼에게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온건(modéré)한 인물이고 “혼란을 원치않는”(qui ne vent pas le désordre) 인물이라고 호의적으로 보기도 했으나, “부유한 부르조아 저택”(maison bourgeoise riche)에 살며 에드워드와 존 케네디의 사진을 거실에 붙여놓고, 케네디를 숭상하는 인물이란 점을 더러 비꼬기도 했다. 김대중에 관해서는, 피납사건과 야당집권시의 강력한 후보라는 정도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을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체제운동의 테마는, 세 신문에서 모두 지배적인 경향이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세 신문에서 모두 호의적으로 다른 유일한 테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L'Humanité가 반체제운동을 조명하는 시각은 다른 두 신문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Le Monde가 재야세력의 반체제운동이 10.26 이후, 반미경향을 띠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Le Monde와 Le Figaro 모두, 박정권하의 반체제 운동의 성격을 유신체제 청산파,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L'Humanité는, 자유 민주주의 실현외에, 다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체제 운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 표명의 정도에서도 세 신문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L'Humanité의 중립적 태도와 호의적 태도의 비율이 15:20인데 반해, Le Monde는 34:20, Le Figaro는 14:6으로 중립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

〈韓美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세신문은 모두 다각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

10.26—美개입의 카테고리는, 10.26사건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개입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가 등의 문제에 관한 보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0.26—美반응은, 10.26사건 직후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들로, 극동지역 미합대 이동, 주한미군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등, 미정부가 행한 군사적 조치와, 對北경고, 對중공, 對소련 협조요구 등 외교적 조치로 나누어 분류했다.朴—카터의 카테고리는 10.26이전 박정권과 카터 정부와의 관계 또朴사후 카터의 조전내용에서 드러나는朴—카터의 관계에 대한 평가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은, 10.26사건 이후 카터대통령, 혹은, 미행정부 고위층들의 성명 속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국 방위정책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한다. 美개입 전망의 카테고리는, 박체제 붕괴 이후 한국의 장래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깊이 개입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내용들이다.

10.26—美개입 : L'Humanité는 10.26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거의 의심치 않고 있었다. 한국의 보호자인 미국(*le protecteur aéricain*)은, 부마사태 이후 한국에서 사회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고(*danger à laisser la tension monter*) 따라서 “통치 방법을 바꾸거나 최소한 바꿔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la nécessité se faisait sentir de changes de méthode ou du moins d'en donner l'impression*) 있었다는 것을 개입 가능성의 이유로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후 “미당국은 별로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les autorités américaines ne semblent pas avoir été surprises outre mesure*)는 사실, 미국이 항상 청와대를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 10.26사건의 소식은 워싱턴의 발표로 맨처음 전해졌다는 사실, 7합대의 기함인 Blue-Ridge가 사건 발생 바로 직전인 화요일에 부산항에 정박했다는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로운 우연”(*Comme par le plus grand hasard*) 같은 사실들이, 미국이 10.26사건에 개입 되었으리라는 심증을 굳하게 하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당국이 사건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rare sont ceux qui croient que les autorités américaines ont été prises à l'improviste*), 미국이 새로운 형태로 제국주의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도(*une tentative pour préserver sous de nouvelles formes les position de l'impérialisme*)로서 10.26사건을 유발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Le Figaro는, 10.26사건의 정보를 맨처음 제공한 것이 미국무성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역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했다.

Le Monde 역시 그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79년 여름, 카터는 “박대통령의 영광스러운 퇴진방법”(formule “honorable” pour faire quitter de la scène M. Park)을 찾고 있었으며, 10.26사건 직전 한국을 방문한 해롤드 브라운이 그 방법을 제시하여 박정부의 반발을 샀다는 일본 외교계에 떠도는 풍문과朴—카터간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불화관계를 지적하며 “이 불화들은 서울에서 일어난 기묘한 결투극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ces différends ont-ils un rapport avec l'étrange règlement de compte qui vient de se dérouler à Séoul?)라는 의문의 형태로 미국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10.26—美반응 : L'Humanité는 10.26사건 이후 미국이 취한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강력한 미합대 한국근해에”(une puissante escadre nord-américaine dans la mer de Chine)라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L'Humanité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극동 함대를 한국근해에 집결시키고, 항공모함을 부산에 입항시킴으로서, 긴장상태를 가중시키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étouffer les questions qui ne peuvent manquer de se poser)이며, “남한의 국민을 협박”(intimider la population de la Corée du Sud)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격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고한 사실에 대해 미국측이 “민주인민 공화국”的 어떤 “이너시아티브”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prétextant de possible “initiatives” de la part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사건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지 말것을 촉고”(en “conseillant” de ne pas chercher à profiter de la situation)하였다고 보도하며 “이너시아티브” “총고” 등의 단어에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핑계를 대면서”라는 어휘를 써서, 미국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다. 이어서, 이같은 미국의 경고를 정당화할 만한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이 부당하게 경고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했다.

Le Monde와 Le Figaro는, 북한이 비교적 자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의 경고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정도였고,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며 비교사태 3호가 비교적 정도가 낮은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미합대의 이동상황을 보도했다.

朴—카터 : L'Humanité는, 10.26사건 이전의 박동선 사건, 인권문제,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계획을 둘러싼 양국정부 사이의 관계악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朴사후, 카터가 한국정부에 보낸 조전의 내용에 의거해서 박—카터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카터의 친구”(l'ami de Carter)라는 제목하에 다루어진 기사에서, L'Humanité는, 카터가 문제의 전문에서, “고인에 대한 칭송을 들어 놓았으며”(un message tressant les louanges du disparu), 고인을 “확실한 친구”(ami solide), “확실한 우방”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박정권이 미제국주의의 협조자 였다는 사실에 대한 “명약관화한 고백”(aveu accablant)이라고 주장했다.

Le Monde, Le Figaro는, 조전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 10.26이전 두 정부 사이의 불화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립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에 덧붙여, Le Monde는, 朴—카터의 불화는, 카터가 팔레비와 소모사를 잊은 뒤 아직도 “독재자 친구들”(dictateurs amis)을 다루는 법을 터득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두 정부사이의 불편한 상황에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동맹관계인 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韓美방위조약 : L'Humanité는, 카터가 한미방위조약 준수를 재확인 했다는 사실을, 카터의 친서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을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Le Monde와 Le Figaro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 카터의 철군정책과 수정, 원폭무기의 한국배치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Le Figaro가 이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는 데 반해 Le Monde는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으로 보아, 카터의 철군정책 수정을 비난하는 에드워드 캐네디도, 실제 집권을 하게 되면 달리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il resté à savoir s'il agirait autrement s'il était Président)이라며, 카터 정부의 한국방위정책을 은근히 두둔하기도 했다. 그러나 Le Monde는, 이같은 미국의 한국 방위정책이 카터의 인권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위를 인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는 것어서, 박정권이 인권탄압을 조장한 결과가 되었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美개입 전망 : L'Humanité는, 朴사후, 한국의 체제변화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신문과 달리 어떠한 추측도 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한국민들이 스스로 그 운명을 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개입전당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반면에, *Le Monde*와 *Le Figaro*는, 장차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미국의 개입없이는 한국의 민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해 회의를 보여주어서 *L'Humanité*와는 상반되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 신문 모두 한미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Le Monde*나 *Le Figaro*는 이같은 불평등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지만, 한국인 스스로 국방, 인권문제, 사회적 혼란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미국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Le Monde*는, 미국의 한국 방위정책이 한국에서의 인권존중 실현에 한계로 작용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의 민주화 실현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umanité*는 이와 견해를 달리해서, 그같은 불평등관계가 제국주의에 와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민의 자주의지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개입으로서,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때 민주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한미관계를 보도하는 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L'Humanité*는 한 카테고리에서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머지에서 모두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한미관계의 지배적 경향이 강하게 비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Le Figaro*에서는, 지배적 경향이 호의적이었고, *Le Monde*는, 테마전체의 지배적 경향은 비호의적이나, 두 카테고리에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관계 테마 전체의 지배적 경향이 비호의적인 것으로 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한것이 카터, 10.26—美개입의 카테고리들인데, 이것은 주로, 총격전 스타일의 상황으로 이끌고 간, 미국 개입의 방법, 또 카터의 서툰 외교기술에 주로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L'Humanité*처럼 미국의 한국개입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북한의 태도〉

北一對美, 北一對韓은 10.26사건 이후는 물론, 평소 북한의 미국과 한국에 대한 태도 내지는 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세 신문 모두, 이 문제들을 빼놓지 않고 다루었지만, 10.26사건 이후 북한의 반응이 소극적이었던 탓인지 혹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탓인지 보도량은 그리 많지 않다. L'Humanité도, 다른 신문보다는 빈도가 약간 높은 편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北一對美： L'Humanité는, 10.26 직후, 미국이 취한 군사적 조치에 항의하는 북한의 비난을 노동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인용문에서, 북한은 “미국이 파시즘을 수호하고,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으며, 학생과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합대를 과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L'Humanité는, 아무런 논평없이 중립적 태도로 인용보도 하는 데 그쳤다.

Le Monde, Le Figaro 역시 같은 신문기사를 인용보도 했고, 비록 인용부분이 꼭 같지는 않으나, 그 핵심적 내용이나 보도태도에서는 L'Humanité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北一對韓： L'Humanité는, 북한이 10.26이후 남한의 혼란을 이용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미국의 경고가 과장된 기우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동신문의 사설을 인용하여,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고, 구정권의 인사들도 앞으로 태도를 바꾸면 용인할 수 있다고 제의한 내용을 소개했으나 단순한 인용보도로 그쳤다.

Le Monde와 Le Figaro는, 북한의 對南정책을 L'Humanité 보다는 비호의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Le Monde 역시, 10.26사건 이후 북한의 자중태도를 호의적으로 보기는 했으나, 북한에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위의 노동신문 사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 김일성의 통일방식에 대한 제의가 남한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가리라 믿는다면 오산이고, 남한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le grand leader)로 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확립은, 김일성 태제와 같은 다른 또하나의 전체주의 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북한체제에 비난을 가했다.

Le Figaro는 북한이 남한의 혼란상태를 이용하여 남침을 시도한다면, 3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며, 이 같은 점을 78년 등소평이 북한 방문 시에 “충분히 깨닫도록” (Deng Xzaoping leur a fait amplement comprendre) 했다는 사실을 들어, 北韓의 호전성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시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L'Humanité 보도 태도의 지배적 경향은 호의적인 것으로, Le Figaro와 Le Monde는 비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별로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L'Humanité가 비호의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으나, 중립과 호의적인 비율이 7:1로 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 Monde나 Le Figaro처럼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신문의 “평화적 제의”를 소개하여, 북한에 평화적 면모를 주려는 시도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응호하려는 태도의 표명은 삼가고 있다.

〈10. 26—쿠테타, 10. 26—사고, 10. 26—암살, 10. 26—사건 경위〉

세 신문은 모두 10. 26사건에 대한 첫 정보를 미국무성의 발표에서 입수했다. 이때 미국무성은, 한국에서 쿠데타 발생으로 박대통령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었다. 그 후, 한국정부의 공식발표는, 쿠데타설을 부인하고, 처음에는 우발사고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의 불화에서 빚어진 사고였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김재규의 계획적인 암살사건이었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차례 혼선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세 신문은 노골적으로 한국정부의 발표내용에 의구심을 나타 내었고, 이것이 더욱 쿠데타 가능성은 믿도록 자극했던 것 같다.

L'Humanité는, 사고설, 암살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음직하지 않은”(invraisemblable) “터무니 없는”(roambolesque) 한 각본(imbroglio)이라고 일축했고, 미국이 개입된 쿠데타의 가능성은 짚다고 보도했다.

Le Monde와 Le Figaro 역시 쿠데타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한국정부의 최종 발표내용을 받아들여 상세히 보도했고 논평도 몇 붙였다. Le Monde는, 경들의 총격전을 방불케하는 방법으로 국가원수가 제거된 사실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뽁시 상하게 했다(beaucoup de Coréens souffrent dans leur fierté nationale des procédés de gansters utilisés par son entourage pour l'éliminer)라는 표현으로, 10. 26사건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그러나, Le Monde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발표내용을 극적으로 서술한 후 이 사건이 “한국적인 폭력”(Violence à la Coréenne)으로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이 흥노족의 먼 후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고, 인종주의적인 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

L'Humanité가 미국이 어떻게 사건을 배후 조종하였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반면, Le Monde는, 박정권의 권력충내의 힘의관계에 대해 주목했고, Le Figaro는 사건의 극적 전개과정에 특히 흥미를 보였다. 이처럼, L'Humanité의 10·26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배후세력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10·26사건의 경위에 대한 보도내용이 빈약하다.

〈전 망〉

민주화, 유신체제유지, 야당정권, 군개입 :朴사후의 한국장래에 대해, Le Monde와 Le Figaro는, 민주화의 가능성, 구체제인 사람들의 재집권 가능성, 야당정권의 가능성, 군개입의 가능성등, 다각적으로 탐진했다. 그러나 L'Humanité는 가능성을 탐진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신체제나, 그와 유사한 체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때문에, L'Humanité에서는 전망의 테마에 관한 카테고리의 종류가 다른 신문에 비해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L'Humanité는 한국에 관한 기사중 서명된 유일한 논평기사에서, 자유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이어서, “한국민이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그들에게 물려진 재갈을 뽑아낼 수 있다.”(C'est dans la lutte et par la lutte qu'il pourra briser les barreaux des prisons, arracher le leàillon)며, 투쟁을 격려하고, “우리는 그들의 투쟁에 성원을 보낸다”(de son combat nous sommes solidaires)라는 선동적인 문안을 싣고 있었다. 이것은, L'Humanité의 기사중에서 노골적으로 선동적인 경향을 띤 유일한 부분으로서, 좌익계열의 논평기사나, 집단집회의 연설문, 성명서에서 의례적으로 끝부분을 장식하게 되는 선동적인 문안의 격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이 신문이 격려하고 있는 “투쟁”에, 북한의 역할이나, 후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 주목을 끈다.

이상 각 테마별 지시식 의미를 요약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L'Humanité는 박정권에 대해 세 신문 중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신문들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제성장 업적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신문들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차체제에 대해서보다 덜 비판적이나,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특히 對반체제 정책에 관해, 다른 신문들이 소개하고 있는, 최정부의 반체제에 대한 관용의 노력을 전혀 다루지 않고 명동사건의 처리방법을 들어 박체제나 다름없는 반체제 탄압정책을 꼬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견해에 있어서 세 신문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L'Humanité는, 그러한 상황을 한국 정부 권력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선택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신문들은 한국인의 자주능력 결여에서 벌어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L'Humanité는 우선 미국의 개입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나, Le Monde나 Le Figaro는, 한국의 민주화 성취를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체제운동을 세 신문 모두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L'Humanité는 다른 신문들보다 반체제운동에 대해 관심도가 높았고, Le Monde가 반체제 인사들보다는 박정권하의 과거 실력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그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비해, L'Humanité는, 반체제 인사들에 관해 훨씬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신문들이 반체제 운동의 성격을 단순히 유신 체제의 청산을 위한 민주화 투쟁으로 보고있는데 반해, L'Humanité는 민주화와 동시에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0.26사건의 경위에 대해, Le Monde와 Le Figaro는 한국정부 당국의 발표내용에 의혹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받아들여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논평하였으나, L'Humanité는, 미국이 개입된 쿠데타라고 확신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정부 당국의 암살설을 확당무게하고, 있음직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해 버리고 있다.

북한문제에 있어, L'Humanité는 예상밖으로, 그리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드러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10.26이후 북한의 자종태도를 호의적으로 보도 하기는 했지만, 이점은 Le Monde도 마찬가지

였고,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내용을 중점적으로 단순히 인용보도 하고 있는 점도 다른 신문들과 흡사하다, 비록 다른 신문들처럼, 북한의 호전성이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을 특별히 호의적으로 다루지도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10.26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다른 신문들이 여러가지 징후를 토대로 해서 제가끔 여러가지 가능성은 각각으로 전망해 보고 있으나, L'Humanité는 유신체제가 지속되거나, 유사한 체제로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되고, 한국민의 투쟁에 의해 적극적으로 민주화가 행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L'Humanité의 보도내용이 갖고 있는, 지시적 의미의 대체적 줄거리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적 의미들의 연결이, 곧바로 L'Humanité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사속의 합축의미를 아울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단위별 합축의미는 그 정보단위가 가지고 있는 지시적 의미의 관점, 그 정보단위를 다루는 태도의 특징 등을 통해 추출될 수 있을 것이지만, 기사전체를 관찰하게 될 때는, 각 정보단위들의 양적 차이, 태도 표명의 정도와, 표명된 태도들의 강도의 차이 같은 정보단위들 사이의 각각적 관계가 합축의미 구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어떤 주제들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사실 자체에서 또한 각 주제들이 다루어진 시각들 사이의 관계속에서 합축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관심도나 부여한 중요성의 정도는 단순히 빈도수의 비교만으로 측정될 수는 없다. 단순히 여러번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제가 관심있게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빈도수와, 태도표명의 정도, 태도의 강도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관심도나 중요성의 정도는 보다 정확히 타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주요 카테고리 분석은 이같은 방법으로 L'Humanite 기사에 담겨진 합축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4) 주요 카테고리 분석

주요 정보단위는, 신문별로 평균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하여, 절대태도표명도, 균형태도표명도, 절대경향도, 균형경향도 등

을 계산하여, 이중 두 항목 이상에 항목별 평균치 이상의 수치를 드러내는 카테고리의 정보단위로서, 신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다룬 정보 단위들, 즉 신문이 자주 언급했으며 논의하고자 하는 열의도, 다른 주제에 비해 높고 특정 방향으로 인식이나 평가를 유도해가고자 하는 열의도, 다른 주제에 비해 높은 주제의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L'Humanité의 정보단위 총수는 194개이고, 4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어, 정보단위의 평균 빈도수는 4.4에 달해 평균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카테고리는 모두 23개이다. Le Figaro는, 총 196개에 43개의 카테고리로서, 평균 빈도수는 4.5이며, 평균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모두 18개이다. Le Monde는 총 711개에 51개의 카테고리로서, 평균빈도는 13.9이며 평균

L'Humanité

구 분	빈도율 %	절대표 명도 %	균형태 표명도 %	절 경 향 도 %	균 경 향 도 %
1. 朴—국가수뇌	9.86	66.7	6.58	66.7(—)	6.58(—)
2. 계엄사태	9.86	13.3	1.51	13.3(—)	1.31(—)
3. 10. 26 美개입	7.23	100	7.23	100 (—)	7.23(—)
4. 朴—경제정책	6.58	100	6.58	100 (—)	6.58(—)
5. 10. 26—美반응(군사)	4.61	71.4	3.29	71.4(—)	3.29(—)
6. 최—對반체제정책	4.61	71.4	3.29	71.4(—)	3.29(—)
7. 對박정부국민여론	4.61	100	4.61	100 (+)	4.61(+)
8. 최정부—사회질서	4.61	28.57	1.31	28.57(—)	1.31(—)
9. 앙당저항	3.95	0	0	0	0
10. 朴—경력	3.95	100	3.95	100 (—)	3.95(—)
11. 朴—對의회정책	3.95	100	3.95	100 (—)	3.95(—)
12. 김대중	3.95	0	0	0	0
13. 민주화전망	3.95	66.67	2.63	66.67(+)	2.63(+)
14. 유신현법	3.29	100	3.29	100 (—)	3.29(—)
15. 후계논의	3.29	8.0	2.63	80 (—)	2.63(—)
16. 재야세력	3.29	100	3.29	100 (+)	3.29(+)
17. 北—對美	3.29	0	0	0	0
18. 최규하	3.29	40	1.31	40 (—)	1.31(—)
19. KCIA	2.63	100	2.63	100 (—)	2.63(—)
20. 朴—對外정책	2.63	100	2.63	100 (—)	2.63(—)
21. 朴—장례식	2.63	50	1.32	50 (—)	1.32(—)
22. 朴—카터	2.63	100	2.63	100 (—)	2.63(+)
23. 10. 26 쿠데타	2.63	0	0	0	0
평균비율		65.71	2.66	65.71	2.66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카테고리는 모두 22개에 달한다.

빈도순위에 따라 절대, 균형태도표명도와, 절대, 균형경향도가 계산된 정보단위들의 카테고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밑줄이 그어진 카테고리는 주요카테고리들이다.

Le Figaro

구 분	빈도율 %	절대태도 표명도 %	균형태도 표명도 %	절경 대도 %	균경 향도 %
1. 10. 26 사건수사	10.88	0	0	0	0
2. 朴—국가수뇌	8.16	58.33	4.76	25 (+)	2.04(+)
3. 朴—장례식	6.80	60	4.08	60 (+)	4.08(+)
4. 김재규	6.80	50	3.4	50 (-)	3.4 (-)
5. 계엄사태	6.12	22.22	1.36	22.22(-)	1.36(-)
6. 10. 26—쿠데타	6.12	11.11	0.68	11.11(-)	0.68(-)
7. 10. 26—암살	6.12	55.55	3.4	55.55(-)	3.4 (-)
8. 朴—對의회정책	5.44	100	5.44	100 (-)	5.44(-)
9. 김영삼	5.44	50	2.72	0	0
10. 부마사태	5.44	12.5	0.68	12.5 (+)	0.68(+)
11. 유신헌법	4.76	100	4.76	100 (-)	4.76(-)
12. 10. 26—美반응(의 교착)	4.76	0	0	0	0
13. 한미방위조약	4.76	0	0	0	0
14. 후계논의	4.08	50	2.04	50 (-)	2.04(-)
15. 10. 26—사고	4.08	33.3	1.3	33.3 (-)	1.3 (-)
16. 인권정책	3.40	100	3.40	100 (-)	3.40(-)
17. 최규하	3.40	80	2.72	80 (-)	2.72(-)
18. 朴—카터	3.40	0	0	0	0
평균비율		41.65	2.19	37.02	1.89

Le Monde

구 분	빈도율 %	절대태도 표명도 %	균형태도 표명도 %	절경 대도 %	균경 향도 %
1. 朴—국가수뇌	70	40	2.8	17.14(+)	1.19(+)
2. 김종필	6.8	58.82	3.99	58.82(-)	3.99(-)
3. 朴—경제정책	6.6	90.9	5.99	36.36(-)	2.29(-)
4. 최—對유신체제정책	6.6	84.8	5.6	54.54(+)	3.59(+)
5. KCIA	6.4	96.88	6.2	96.88(-)	6.2 (-)
6. 10. 26—쿠데타	5.6	67.86	3.8	66.86(-)	3.8 (-)
7. 계엄사태	4.8	20.83	0.99	20.83(-)	0.99(-)
8. 10. 26—암살	4.6	60.87	2.80	60.87(-)	2.80(-)
9. 10. 26—사건수사	4.4	68.18	2.99	68.18(-)	2.19(-)

10. 10. 26—美개 입	4. 4	81. 8	3. 59	81. 8 (-)	3. 59(-)
11. 전 망—美개 입	4. 4	36. 36	1. 59	36. 36(+)	1. 59(+)
12. 전 망—軍개 입	4. 4	81. 8	3. 59	45. 45(-)	1. 99(-)
13. 한국역사	4. 2	76. 19	3. 19	38. 09(-)	1. 59(-)
14. 최 규 하	4. 0	45	1. 8	45 (-)	1. 8 (-)
15. 朴—카터	3. 8	47. 37	1. 8	47. 37(-)	1. 8 (-)
16. 10. 26—사고	3. 6	27. 78	1. 0	27. 78(-)	1. 0 (-)
17. 사회 질서	3. 4	52. 94	1. 79	54. 94(+)	1. 79(-)
18. 인권정책	3. 2	93. 75	3. 00	93. 75(-)	3. 00(-)
19. 최—對반체제 정책	3. 2	100	3. 2	25 (+)	0. 8 (+)
20. 정일권	3. 0	33. 33	0. 9	33. 33(-)	0. 9 (-)
21. 한미 방위조약	2. 8	57. 14	1. 59	14. 29(+)	0. 4 (+)
22. 야당지 황	2. 8	35. 71	6. 9	7. 14(+)	0. 19(+)
평 균 비 율		61. 74	2. 87	45. 80	2. 15

위의 표에서 나타난 주요 카테고리들을 테마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에 표시된 것은 절대 경향도이다.

	L'Humanité,	Le Figaro	Le Monde
박 체 제	朴—국가수뇌(66. 7—)	朴—국가수뇌(25+)	경제 정책(36. 36—)
	경제 정책(100—)	朴—장례식(60+)	KCIA(96. 88—)
	朴—경력(100—)	對의회정책(100—)	인권정책(93. 75)
	對의회정책(100—)	유신헌법(100—)	김종필(56. 82—)
	유신헌법(100—)	인권정책(100—)	
	KCIA(100—)	김재규(50—)	
한 미 관 계	對外정책(100—)		
	10. 26—美개 입(100—)		10. 26—美개 입(81. 8—)
	10. 26—美반응(군사적) (71. 4—)		
최 정 부	朴—카터(100—)		
	對반체제정책(71. 4—)	후계논의(50—)	對유신체제정책(54. 54+)
		최규하(80—)	對반체제정책(25+)
10. 26 사경 건위			10. 26-사건수사(68. 18—)
		10. 26—암살(55. 55—)	10. 26—쿠데타(67. 86—)
			10. 26—암살(60. 87—)
민 족 제 동	對박정부국민여론(100+)	김영삼(0)	
	여야세력(100+)		
전 당	민주화		軍개입(55. 56—)
한 국 사			한국역사(38. 09—)

위의 표에서 보면, L'Humanité가 다른 신문과 달리 중요하게 다룬 카테고리는 한미 관계와 반체제 운동의 테마에 속하는 것들이다. Le Figaro는 인물의 카테고리가 셋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후계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Le Monde의 관심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다른 신문과 다른 점은 최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L'Humanité라 호의적으로 다룬 주제는 재야 세력의 반체제 운동, 對 박정부 국민여론, 민주화 등,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관한 것이고, Le Monde에 있어서는, 최정부의 對 유신 체제 정책과 對 반체제 정책이다. Le Figaro는 박정권의 정책은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박정권의 정통성과 박정권이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박정권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다른 신문에 비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에 표시된 각 주요 정보 단위별 절대 경향도를 통해 각 신문이, 특히 정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어느 정도 강하게 드러냈느냐 하는 독단성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L'Humanité는 절대 경향도에 있어서, 세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의 경향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세 카테고리의 절대 경향도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L'Humanité와 비교할 때, Le Figaro와 Le Monde의 절대 경향도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신문 중, L'Humanité가, 주요 주제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독단성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정보 단위의 관점 비교

앞에서 이미 테마별로 세 신문들의 관점 차이를 비교했으나, 여기서는 L'Humanité의 주요 정보 단위들만을 모아 L'Humanité와 Le Monde가 이들 카테고리들을 다루는 데 있어 선택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방법의 차이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Le Figaro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L'Humanité의 주요 카테고리와 Le Figaro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L'Humanité의 주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대한 Le Figaro 신문에서의 보도의 양이 적어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Le Monde와 L'Humanité도 설치되지 않는 카테고리가 많지만, Le Monde는 기사의 양이 많았던 탓으로, 주요 카테고리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를 었기 때문이다,

구 분	L,Humanité	Le Monde
朴—국가수뇌	독재자 박장군 박정희	독재자 박장군 박정희 박대통령
경제 정책	경제성장 실패 사회적 불평등 외국자본에 의 예속 노동자착취	부분적 성공 노동자복지 미개 상태 빈부격차 증대
대외정책	구미,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 에 의존	유럽과 관계 다변화 한일관계 개선 OLP 관계 개선 중동전출 독자성 위해 노력
朴—경력	일본군대 복무 미군에서 군사훈련 쿠데타로 집권	일본군대 복무 미군에서 군사훈련 쿠데타로 집권 여순반란사건 관련
對一의회정책	유정희체도 야당당수 제명	유정희체도 야당당수 제명
유신헌법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
KCIA	김대중 납치	김대중 납치 미국 CIA 한국판 정적숙청 도구 국가내의 국가
10.26—美개입	개입 주장 미국—첫 정보체 공자 청와대 도청 미 합대 사전에 부산 입항 통치방법 변화 필요감지 제국주의 위치 강화	개입 암시 미국—첫 정보체 공자 카터—朴의 퇴진요구 미국—반대파, 일부 군고위층 고무 朴—카터의 불화
10.26—美반응	미 합대이동 주한미군 비상사태 돌입 긴장상태 유발 행위 남한 국민 협박행위	미 합대이동 주한 미군 비상사태 돌입 비상사태 3호
朴—카터	동맹 관계 朴—카터의 착실한 협조자	朴—카터의 독재자 친구 인권문제,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불화심화		
최정부 對반체제정책	명동사건 반체제 탄압 계속	명동사건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 방침 체적 학생 북교 허용 방침 김대중 석방 계획
對박정부 국민여론	민주화 갈망 반독재 항거 상승 기류 반체국주의적 색채	민주화 갈망 朴체제거부
재야세력	선명한 반대파 국민의사 대변 유신헌법 철폐 요구 반체국주의적 색채	유신체제 청산요구 국민의사 대변 통일화 움직임
민주화	미국의 개입제거로 가능 자주적 투쟁으로 가능	미국개입으로 가능

이상의 도표에서 볼 때, L'Humanité의 14개 주요 카테고리들 중에서, Le Monde와 비교해 별다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KCIA, 유신헌법, 对의회정책 등이다.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11개의 카테고리 중, 朴—대외정책, 朴—경력, 10.26—美반응, 朴—카터, 최정부—對반체제정책 등의 다섯개는 사실 자료를 편파적으로 선택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정권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Le Monde가,朴정권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다변화를 통해 독자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으나, L'Humanité는, 선진자본국과의 관계만을 부각시켜, 박정권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존하여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경력에 대해 Le Monde가 일본군대 복무경력과, 미군대에서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실 외에, 여순반란사건의 관련성을 언급하여, 박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L'Humanité는 위의 두 가지 사실만을 들어, 철두철미 제국주의 세력을 추종해 왔던 인물로 그리고 있다.

10.26—美반응에 대해, L'Humanité는 주한미군에 내려진 비상사태 3호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방어용이며, 공격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합대이동파,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만을 소개하여, 미국이 전쟁도발을 기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朴—카터 관계에 있어서는, 10.26사건 전에 오랫동안 계속된, 朴—카터 사

이의 여러가지 문제를 둘러싼, 불화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카터의 조전의 내용만을 들어 한국이 미국의 철저한 협조자였고, 추종자였다고 주장했다.

최정부의 **對반체제** 정책에 대해서도, 최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권, 복교허용계획과, 긴급조치 9호 철폐계획을 소개하지 않고, 명동사건 처리방법만을 보도하여, 박정권하에 행해졌던 반체제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나머지 여섯개의 카테고리에서 발견되는 관점의 차이는, 사실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박정권의 경제정책은, 외국자본에의 예속과, 노동자착취라는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패라고 평가했고, 미국이 한국에서 행해 온 제국주의적 형태를 감안할 때, 10.26사건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한번도 붙여주지 않았고, 한국의 독재정치가 미국의 후원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권하에서의 반정부 여론이나, 반체제운동이 당연히 반제국주의 투쟁인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의 민주화의 전제조건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엿보이는 사실자료 선택에 있어서의 편파성이나 사실을 해석, 평가하는 시각의 특수성은 특정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모두 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 희생물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L'Humanité의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L'Humanité가 다른 신문보다 유별히 관심을 많이 보인 주제들은 한미관계와 반체제운동의 테마에 속하는 것들이었으며, 주요 카테고리를 다루는 태도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독단성의 정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사실자료의 선택에 편파적이었으며 이를 카테고리들은 일관성있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제국주의의 지배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독단성의 정도가 높았다는 것은, L'Humanité의 한국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그만큼 뚜렷했다는 것이며, 사실선택에 있어 편파적이었다는 것은, 다양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특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사태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L'Humanité

가 한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기본입장과, 기본원칙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며, 한미관계와 반체제운동에 다른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한 근거에도 제국주의의 지배형태와,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제국주의론의 기본도식에 의해 한국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L'Humanité는, 10.26사건 이후 한국문제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보도 태도나 경향은 제국주의론에 의해 유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L'Humanité에 의하면, 10.26사건은 미제국주의에 희생당한 약소국에서, 미제국주의 세력이 해게모니 재강화를 위해 꾸며놓은 하나의 “음모”(complot), 그러므로 “외부에서 온 음모”(Complots venus d'ailleurs) 바로 그것이다. L'Humanité의 14개의 주요 정보단위 카테고리중에서도, 절대·균형태도표명도, 절대·균형경향도의 네 항목에서 모두 일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 즉 L'Humanité가 가장 관심있게,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카테고리가 10.26—美개입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볼 때 꽤 상징적이다.

IV. 결 론

10.26사건에 대한 L'Humanité의 보도경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국주의론의 도식에 의해, 한국사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명백한 기본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그 도식에 맞지 않는 사실들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하고 있고, 채택된 사실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도 그 도식에 맞추어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파적인 사실자료의 선택이, 정보원의 결핍 때문으로 볼수는 없는 것이 L'Humanité는 다른 신문이나 마찬가지로 세계 5대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에 특파원을 상주시켜, 일본 및 극동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Le Monde나 Le Figaro도 한국취재는 동경주재 특파원이 담당하고 있고, 특수사태 경우에 한국에 별도로 특파원을 파견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L'Humanité의 “편파성”은, 정보원의 결핍이 아니라, 편집진들의 세계관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Humanité의 주요 비교 대상이었던 중도좌파지인 Le Monde가 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들을 조명하면서도, 그같은 단순성에 빠지지 않고 객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고르게 보도하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고 있어, L'Humanité의 편파성과 단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점은, 공산세계의 이념분쟁이 다각화하고 있고, 유로코뮤니즘의 대두와, PCF내의 뽀띠 부르조아 대거진 출이후, “수정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의 탈을 쓴 부르조아”로서, 부르조아계급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라고, 오래전부터 정통 마르크시스트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온 정당의 기관지였기에, 한국 문제를 덜 경직되고 덜 기계적인 시각에서 조명할지도 모른다는 애초 우리의 기대를 뒤엎고 있다.

정보수단이 발달하고, 열린 사회인 프랑스사회에서 그같은 보도태도가 일 반공중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것이다. 획일성과 기계적 사고에 남다른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L'Humanité의 편집진이 이같은 사실에 둔감한 것은 아닐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태도가 고수되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는, L'Humanité의 “특수임무”와 관련해서 설명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상에 이미 설득되어 있는 간부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부르조아, 혹은 뽀띠 부르조아 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이념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기구로서의 L'Humanité의 기본사명이, 한국사태 보도에 있어서 그같이 교조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PCF는 물론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교조주의를 위협하게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이념의 “준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교조주의는 필요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같은 보도태도에 일관성이 주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옹호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L'Humanité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민주화가 한국민의 자주적 투쟁으로推进되어야 한다고 “투쟁”을 격려하고 있지만, 이 투쟁을 주도할 중심 세력이 누구일 것인가, 그 투쟁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제시도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 투쟁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나,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L'Humanité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

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민족해방운동이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건, 그 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은 노동계급이며, 그들의 정당인 공산당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민중의 자주적 투쟁”에 대한 격려는 노동계급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공산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의 투쟁운동에 보낼 수 있는 종류의 격려가 된다. 북한 공산당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보고 있는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어떠한 형태의 투쟁에서건, 당연히 북한 공산당의 역할을 언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한국사태에 대한 교조적인 모든 태도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L'Humanité의 교조적인 반미제국주의적 태도가 친 북한태도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PCF와 북한공산당이 “형제당”의 도리와 우의로서 맺어져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반드시 PCF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비록 한국사태를 보는 PCF의 이념적 틀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해도 오늘날처럼 공산세계의 이념분쟁이 다각화되고 국익을 위해 이념적 원칙이 손쉽게 회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사태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의례적인 태도로나마 북한의 입장이나 역할을 적극적으로옹호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Humanité는 PCF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세력, 즉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세력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